

북한 국방위원회 대남 공개 질문장의 의도 분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Online Series CO 12-04

최근 들어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 ‘국방위원회’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작년 말 북한이 김정일 장례식을 치른 직후 우리 정부의 김정일 조문 제한 조치를 비난하면서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은 ‘국방위원회 성명’(12월 30일)을 통해서였다. 또한 작년 봄 우리 국내 일부 예비군 사격장에서 김정일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 등과 관련하여 북한이 남한 정부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발표(5월 30일)한 것도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였다. 그해 베이징에서의 남북 비밀접촉(5월 9일)을 폭로한 것도 ‘국방위원회 대변인’(6월 1일)이었고,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표’가 기자회견 형식으로 추가 폭로(6월 9일)를 하기도 하였다.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조평통’이나 ‘아태위’ 명의로 대남비난을 하면서도 가끔은 남북 대화와 협력을 제안해 오는 것과는 달리, 국방위원회(정책국) 명의로 된 대남 문건은 강경한 내용만 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국방위원회의 사업을 보좌하는 기구의 한 부서로 북한의 군사 안보정책 수립에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대남문제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경향은 남북관계를 실리·실용 측면보다는 군사·공작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강경인물들이 대남사업을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지난 2월 2일에도 이명박 정부가 그들의 대화상대가 될 자격이 없다고 강변하는 대남 ‘공개 질문장’을 ‘국방위원회 정책국’ 명의로 발표했다. 명칭이 대남 ‘질문장’일 뿐이지 발표 형식, 내용, 발표직후 동향이라는 3가지 점에서 볼 때 질문의 의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인 선전 문건에 해당한다. 우선, 발표 형식면에서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명의로 발표한 점이 특징이다. 국방위원회 명의로 된 대남문건은 앞에서 밝힌 대로 대화와 협상을 의도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강경 입장을 선언할 때 주로 활용된다. 발표 내용에서도 조문불허 사죄,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전면 이행, 천안함연평도 문제 불거론,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보안법 철폐 등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통일전선 차원의 선전 항목 9개항을 종합해 놓았다. 과거에는 ‘조평통 서기국’ 정도의 수준에서 선전해왔던 것들을 이번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수준의 활동으로 격상함으로써, 그만큼 이 문제를 중요시하는 북한 당국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공개 질문장’ 발표와 더불어 그들의 주장을 선전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질문장’ 발표와 동시에 국방위원회 정책국 일꾼들을 동원하여 기자회견(2월 2일)을 하고, 조총련 기관지(2월 4일, 조선신보)와 재미친북단체(2월 2일,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대변인 성명)를 동원하여 확산을 유도하였다.

북한은 이미 작년 5월말에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했다. 작년 말에 다시 ‘영원히’를 보냈다. 상대하지 않으면 될 뿐인데 이번에 다시 ‘공개 질문장’을 발표하여 상대하지 못할 ‘이유’를 극구 밝히려는 이유는 따로 있다.

첫째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을 유도하고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들의 의도에 맞추어 전환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는 관계를 풀지 않을 것임을 재차 밝힘으로써 우리 정부와 민간, 보수와 진보세력, 나아가 한미 정부 간 틈새를 조장하려는 데 있다. 동시에 차기 정부는 북한이 주장한 9개 질문사항을 고려하여 대북정책을 수립할 때 북한과 ‘대화의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 기회의 창이 열려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데 대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공세를 취함으로써 다시 공을 우리 쪽으로 돌리는 효과도 고려했을 것이다. 우리의 선거정국이 다가옴에 따라 남북대화의 실종 책임까지도 다시 우리에게 전가하겠다는 선전전인 것이다.

북한은 2012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도 ‘외세 공조, 대북 적대정책, 북침전쟁 연습’에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을 선동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상종하지 않을 이유’를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한편 북한이 대남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가 되는 ‘남조선 정세’를 잘못 읽고 있다는 점도 대남투쟁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 예컨대 조문문제에서 과거와는 달리 우리 정부가 김정일 조문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정함으로써 종전처럼 이문제가 비등하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은 “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대상으로 되고 있다”(1월 1일, 신년 공동사설)고 과장하고 있다.

둘째로, 북한이 대남 ‘공개 질문장’ 형태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목적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도모하려는데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신속한 대북식량 지원을 촉구하려는 데 있다. 2월 4일자

조선신보는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을 솔직히 대변해 준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뒷걸음치고 식량 지원문제에서 종전의 합의를 뒤집고’ 있는 것은 워싱턴으로 오려면 서울을 통해야 한다는 ‘미국의 궤변’ 때문이지만, 현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북한 국방위원회의 입장이며, 미국은 지난 1월 14일 북한 외무성이 밝힌 대로 식량지원 약속 이행 등 ‘신뢰조성 의지’를 보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공개 질문장’ 발표를 통해 대남정책을 둘러싼 내부이견(異見)을 정리한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 근거는 우선, 2월 4일자 조선신보가 우리 정부와 마주앉아도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점이 조선(북한)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 점이다. 조선신보의 보도로 추론하면 북한 내부에서 한동안 남한이 지원하는 물자의 확보 필요성을 거론한 세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관례상 북한의 각 기관들은 연말에 다음해 사업목표를 확정하는데, 당 통일전선부가 대남사업을 통한 실리확보 물량을 제기했을 수 있다. 그 대외적인 표현이 연초의 대남 대화공세였다.

또 하나의 근거는 ‘공개 질문장’에서 평화체제 추진의 방법론이기는 하나 ‘북미 최고위급 군부접촉’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조선신보가 다시 이를 받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북한 내부적으로 남북관계 활용론과 마북관계 집중론이 대두되었으나 후자가 현실적이라는 쪽으로 귀결되었음을 의미할 수가 있다. 그 결과로 작년 연초(1월 5일) 북한이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으로 당국 대화를 제기한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국방위원회가 나서서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나 분석된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북한 내부에서는 한 때 당 통일전선부가 어느 정도 대남접촉을 통한 실리 확보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통전부는 대남 선동과 동시에 실리를 확보해 낼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다 김정일 사망으로 상황변화가 생겼을 것이다. 국방위원회가 실리보다는 조문이라는 체제문제를 명분으로 우리 정부와의 ‘상종 불가’를 재차 선언함과 더불어 북한 내부에 경제지원 등 ‘대남 기대 불망론’을 확산시키기로 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북한의 대남 기구들은 대화-공작 기구를 불문하고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설정한 정책 방향에 맞춰 우리 내부 국론분열을 피하고 ‘대북정책 전환’을 도모하는 데 분주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아직도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국민의식이 북한의 일방적인 선전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다.